<2015 행정자치부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사업 결과보고

2015. 1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연구원: 남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철민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보조연구원: 유지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이주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이은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목차>

1.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 통계 구축의 의의 ····· 1

2.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NGO DB구축사업 ····· 2

3.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 ····· 4

3-1.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 4

3-1-1. 전수조사 ····· 4

3-1-2. 표본조사 ····· 11

3-2. 지원·서비스 전략 컨설팅 ····· 15

1.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구축의 의의

가. 광의의 한국시민사회 지형도 그리기

- 한국 시민사회가 급변하는 세계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변화상을 지형도로 구축함
- 풀뿌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들의 욕구가 어떤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음
-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포괄적 조사내용을 담은 국내 유일의 기초통계자료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가 건강한 시민사회에 대한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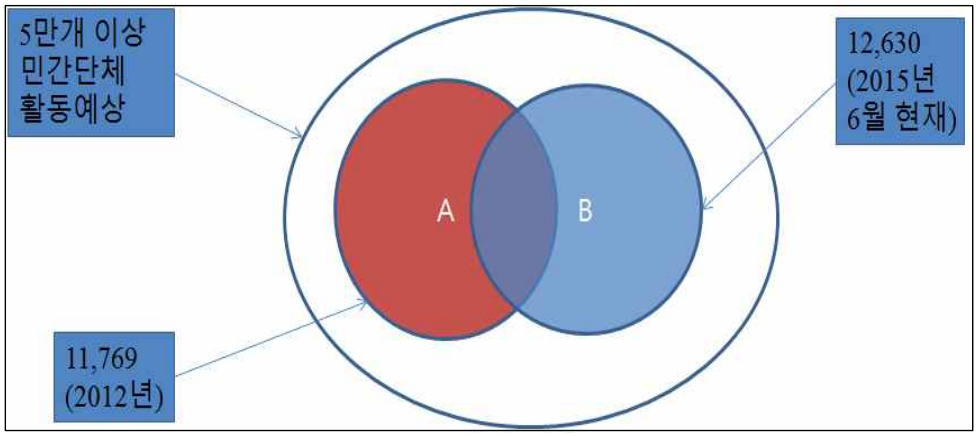
나. 협의의 비영리등록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영역 및 주요 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며,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 및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단체 정보 오류 및 활동정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단체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됨

다. 조사배경

-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초 조사는 그 동안 두 가지 채널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는 2000년부터 3년마다 행자부 지원으로 [한국민간단체총람]이 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행자부 등록 및 비등록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자료로서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근거하여 법이 지원을 얻고자 하는 단체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 한 단체정보임
- 전자의 경우는 조사단체 수는 2003년 3,937개, 2006년 5,556개, 2009년 7,925개, 2012년 11,934개로 확대되었으나 아쉽게도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하지 않음.
- 후자의 경우도 중앙 및 시/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등록단체에 대한 정보가 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비영리등록단체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기초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한국 민간단체 데이터 구성도



A형 자료: [한국민단단체총람], B형 자료: 행자부 등록 [비영리민간체]

2.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NGO DB구축사업

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의 활동 목적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이하 시민사회센터)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 및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시민사회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중·일 시민사회 운동 비교연구라는 4가지 연구 축을 중심으로 활동함
- 특별히 시민사회센터는 한국시민사회지형도 구축사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시민사회와의 국제비교를 목표로 함

나. 수행기관의 NGO Database 구축사업

- 2013년 NGO Database 구축사업

- 시민사회센터는 한국시민사회지형도 구축을 목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총람자료를 DB로 전환하는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함.
- 11,193개 단체정보를 중요 변수를 중심으로 재분류 및 코딩하여 기초통계 자료를

구성함.

- 분석 가능한 변수로는 단체영역, 활동지역, 회원 수, 예산, 설립연도, 운동목표, 주요활동 및 사업, 네트워크, 실무자 및 책임자 정보 등을 포함함

• 2014년 NGO Database 구축사업

- 시민사회센터는 2013년 NGO Database 구축 경험을 토대로 시민운동정보센터와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무총리실 지원 하에 <한국 NGO 센서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비조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함

<표 1> 국내 최초로 지역 및 영역을 고려한 표본(샘플) 조사 틀 구축

지역별 분포도						영역별 분포도					
1	서울	3,372	11	충남	410	1	환경	1,491	11	소비자권리	96
2	부산	617	12	전북	839	2	인권	306	12	도시/가정	390
3	인천	472	13	전남	452	3	평화/통일	482	13	노동/농어민	347
4	대구	399	14	경북	548	4	여성	687	14	외국인	240
5	대전	390	15	경남	589	5	권리/감시	143	15	모금	31
6	광주	388	16	제주	255	6	정치/경제	1,538	16	자원봉사	905
7	울산	270	17			7	교육/연구	622	17	국제협력	229
8	강원	443	18			8	문화/체육	991	18	대안경제	182
9	경기	1,852	19			9	복지	2,215	19	온라인활동	178
10	충북	343	20			10	청년/아동	1,035	20	기타	548
			소계	16개 지역	11,639				소계	20개 영역	12,657

※ 표본조사: 7개 권역별(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강원충청제주) 거점도시 대상 영역별 할당; 표본조사 결과: 표집 (611개) 표본 목표: 300개, 실제 조사단체: 219개

다. 2015년 NGO Database 구축사업과의 연계성

- 2014년 국무총리실 지원 사업은 진보/보수 진영을 넘어선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행정자치부 등록의 비영리민간단체 자료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됨
- 2015년 구축사업은 2014년에 시민사회센터가 구축한 국내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첫 시험대가 되었으며, 그 결실은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임.
- 시민사회센터는 2015년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 한국 시민사회 기초통계의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3.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

3-1.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3-1-1.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전수조사

가. 전수조사 추진전략

- 전수조사의 목표

✓ 한국 시민사회의 기초통계의 부재로 인하여 전체 NGO의 숫자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국시민사회의 현실임
✓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등록된 단체와 비등록단체를 포함하여 5만개 이상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행자부에 2015년 6월 현재 12,630개의 등록단체가 있으며 이러한 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한국시민단체의 특성과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에 필요한 전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본 조사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체제 개선, 각종 지원, 서비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초기 수행전략

✓ 2015년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지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일부로 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을 수행
✓ 행자부 등록단체(12630개)에 대한 웹서베이를 통한 전수조사 실시
✓ 서울대학교 시민사회센터에서 <2015년 한국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 설문지 개발
✓ 설문내용; 단체기본정보(단체명, 주소, 회원수), 시민사회 일반, 단체 목표 및 활동, 연대활동, 재정과 집행, 온라인활동

나 전수조사 추진과정

- 웹서베이 진행

✓ 행자부에 등록단 단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웹서베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목록에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만 기입되어 있으며 단체나 대표자 이메일주소가 부재한 것을 발견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에서 단체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직접 각 단체에 전화를 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
✓ 수집된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웹서베이 URL을 보내주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센터 홈페이지에 배너를 올려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2015. 10.7 조사시작)
✓ 추가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파일을 발송하여 응답하도록 함

- 모집단(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활동하지 않는 단체, 전화번호가 누락된 단체 등의 모집단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행자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리스트에서 수정하는 작업 병행

<웹서베이 대상 모집단의 특성 1: 중앙등록단체>

계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1,531	11	51	4	12	2	7	4	7	18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43	181	151	10	33	203	161	37	9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180	175	46	101	11	28	1	1	9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	-
	7	6	16	3	2	1		-	-

<웹서베이 대상 모집단 특성 2; 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11,099	1,813	703	386	637	547	488	333	20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0	297	402	375	898	528	702	672	318

- 관리번호 부여

✓ 응답한 단체에 대한 확인과 등록단체들에 대한 추후 관리를 위해 각 단체에 고유한 관리번호를 부여함

✓ 번호 부여방식; 소속(중앙/시도)-0000(4자리 수)

- 독촉전화

✓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진행된지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각 단체에 전화를 하여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해줄 것을 부탁(2015.11.4.부터)

✓ 우선적으로 전화한 대상 단체로 설문지를 수신하고 응답을 시작했지만 초기에 중단한 단체, 그리고 5회 이상 안내메일이 발송되었는데 응답이 없는 단체들을 선정

✓ 응답을 중단한 단체에 대해서 중단사유를 묻고 조사목적, 비밀보장, 조사의의, 혜택제공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을 문의하여 새롭게 웹서베이 발송

- 비영리민간단체 목록에서 전화번호 누락된 단체

✓ 원래 목록에서 전화번호가 누락된 약 1000개 정도의 단체를 발견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전화번호를 찾음

✓ 전화를 하여 이메일주소 수집하여 웹서베이 발송

- 이메일로 설문지 발송

✓ 웹서베이 진행 중 전체 설문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단체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여, 설문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사결과; 전수조사 추진 결과 및 분석의견

- 전체 단체 수 및 이메일 주소 확인결과

소속	전체 단체수	전화 번호수	이 메 일 수	소속	전체 단체수	전화 번호수	이메일 수
중앙	1531	1498	1060	서울	1808	1686	961
부산	703	665	249	대구	386	371	196
인천	637	579	298	광주	547	392	230
대전	488	459	207	울산	333	324	149
세종	20	18	2				
경기도본청	1483	1262	292	경기도북구청	497	435	84
충청북도	402	387	62	충청남도	375	336	65
경상북도	702	597	86	경상남도	672	640	119
전라북도	898	801	140	전라남도	528	430	51
제주도	318	295	65	강원도	297	260	57

- 전수조사 응답결과(12.7현재); 설문 응답 완료된 단체 759개

-일정별 현황

발송 회수	발송일	전체대상	발송성공	응답완료	응답중단
1 차	10/08	1,484	1,297	63	101
2 차	10/16	2,538	2,092	119	230
3 차	10/20	2,733	2,275	169	306
4 차	10/22	2,733	2,275	180	310
5 차	10/27	2,733	2,275	232	350
6 차	10/30	3,005	2,470	245	363
7 차	11/03	3,846	3,106	337	477
8 차	11/06	3,846	3,106	355	523
9 차	11/06	3,861	3,120	373	541
10 차	11/10	3,828	3,090	411	531
11 차	11/12	3,828	3,090	433	569
12 차	11/17	3,828	3,090	524	597
13 차	11/26	4,761	4,010	660	721
14 차	12/07	4,768	3,975	770	763

-전체발송 단체수(유효) 4,768

-발송실패 788 / 발송성공 3,975

-미수신 483 / 수신 3,492

-미접속 1,970 / 접속 1,522

-완료 759 / 중단 104/ 중단(문1) 602 / 초기중단 57

※12/17 최종 마감 결과, 응답단체 수는 771개 단체임

<응답단체 지역별 분포(최종)>

지역	N	%
서울	(314)	40.7
부산	(51)	6.6
대구	(43)	5.6
인천	(46)	6.0
광주	(37)	4.8
대전	(43)	5.6
울산	(30)	3.9
경기	(75)	9.7
강원	(11)	1.4
충북	(12)	1.6
충남	(21)	2.7
전북	(22)	2.9
전남	(7)	.9
경북	(19)	2.5
경남	(24)	3.1
제주	(16)	2.1

※ 전체 기초통계 분석 결과(빈도 및 교차표>는 별책부록 1 참조

•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단체목록의 문제와 해결방안

-전화번호 부정확하거나 결번이 많음, 전화번호가 변경된 단체들도 많이 있음

=> 앞으로 단체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 웹서베이나 안내문 발송을 위한 이메일의 부재, 부정확한 이메일

=> 전화를 통한 수집하고 오류 수정

-단체의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전화번호를 찾음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이메일이 없는 경우

=>팩스를 통해서 설문지를 보낸 경우 있음

✓ 단체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하루에 도우미들이 평균 150통의 전화를 함

-오전에 전화를 할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단체가 많음, 오전에 외근이 많아 통화 어려움,

=>가능한 오후에 집중적으로 전화연락을 함

-지방의 경우 서울번호로 전화하면 잘 받지 않음

=>지방의 경우 핸드폰으로 전화함

-실무책임자와 직접 통화가 안될 경우에는 전하는 내용이 와전되는 경우 있음

=> 대표 혹은 실무자를 찾아서 설명을 함

-담당자가 연령이 높을 경우 설명을 해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음

=> 가능한 쉬운 표현으로 설명

✓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문제

-웹서베이 방식을 낯설어 함; 특히 응답자 연령이 높을 경우에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음

=>연령대가 젊은 구성원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발송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예산 관련 문항 등 단체정보가 노출된다는 생각에 응답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음

=>단체에 대한 비밀보장 재확인

-전화를 하는 기관(아시아연구소)와 조사수행기간(현대리서치)이 서로 달라서 전화 안내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설문발송을 하기에 시간적인 지체로 인하여 응답협조 정도가 감소됨

=> 앞으로 조사수행기관과 전화연락 기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조사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불평이 많음

=> 앞으로 조사가 집중되는 10월-11월을 피하고 가능한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음

-설문목적과 단체 활동목적이 다르므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앞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설문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많은 단체들을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3-1-2.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표본조사

가. 표본조사 의의

-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포괄적인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약 5만여개로 추정됨.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목록은 시민운동정보센터가 발간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단체 목록'임. 양자 각각 12,000여개 단체가 포함돼 있으며, 두 목록 간에는 중복되는 단체들이 존재함.
- 본 DB구축 사업의 한축인 전수조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 임의단체를 포괄하지 못함. 또한 전수조사에서는 기초적인 정보만 수집됨.
- 따라서 등록단체와 임의단체를 포괄하고, 단체들에 관한 좀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가 필요함.
- 본 표본조사는 2014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진행했던 비영리민간단체 조사 설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의 연속선상에 있음.

나. 표본조사 전략

- 설문지 구성
  - 질문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많은 질문을 담고 있었던 2014년 설문에 비해, 본 표본조사의 설문은 질문의 숫자를 대폭 줄여서 응답의 용이성을 꾀했음.
- 표본추출 및 1단계 초동설문
  - 표본은 2014년 300개에서 400개로 상향조정함. 표본추출은 7개 주요권역의 기초자치단체 및 20개 의제영역별로 할당해 추출함.
  - 단체들의 조사저항이 예상되므로 목표표본의 2배수인 800개의 조사대상 목록 작성.
  - 온라인 설문을 제작하고, 조사대상 단체들에 E-mail을 통해 설문 실시함.
- 권역별 전문가 위촉
  - 지역 시민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리더(최소 10년 이상 활동 경험)를 전문가로 위촉지역 조사과정의 중간관리자로 위촉함.
  - 지역별 조사원의 고용보다 중간관리자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대비 설문조사 수거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권역별 중간관리자 위촉현황

연번	지역	이름	소속
1	부산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2	서울	염형철·정예진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간사
3	대구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4	경기	유문종	수원그린트러스트
5	충청	송재봉	충북NGO센터
6	호남	서정훈	광주NGO센터

- 표본의 수정과 보완설문
  -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권역별 설문대상 목록 검토를 요청하고, 활동이 중단된 단체 등을 걸러내고, 대체단체를 보완한 조사대상 단체에 설문 실시함.
  - 조사대상 단체들 중 조사저항이 있는 단체들을 대체하기 위해 권역별 중간관리자들의 추천을 받은 단체들을 포함한 조사대상 단체에 설문 실시함.
- 조사참여 독려
  - 중간관리자들을 통한 권역별 설문참여 독려 요청함.
  - 더불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도 독려전화를 위한 도우미를 고용해 설문참여 독려함.
- 응답률이 저조에 따른 대책
  - 등기우편 설문: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다가 중단한 단체들 중심으로 등기우편 설문 시도.
  - 2014년 조사결과 활용: 2014년 조사 내용이 2015년 조사내용과 많은 부분 중첩되고 있기에 리코딩 작업을 통해 2015년 조사결과에 편입. ※ 2014년 조사 표본수: 219개

다. 조사일정 및 결과

- 현재 수거된 설문: 72건(2015년 12월 10일 현재)
- 일정별 현황

발송차수	발송일	발송현황	유효	발송성공	완료	중단
1차	11/02					
2차	11/06	11/09	471	344	13	23
3차	11/10	11/17	579	456	20	40
4차	11/23	11/27	628	499	41	65
5차	12/04	12/09	682	518	72	75

✓ 2014년 조사 내용이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기에 리코딩 작업을 통해 2015년 조사결과에 편입시킴 (2014년 조사 표본 수: 219개)

✓ 총 표본단체 수는 296개임 (12/17일 현재)

지역	N	%
서울	(65)	22.0
부산	(31)	10.5
대구	(23)	7.8
인천	(8)	2.7
광주	(22)	7.4
대전	(20)	6.8
울산	(1)	.3
경기	(43)	14.5
강원	(15)	5.1
충북	(14)	4.7
충남	(4)	1.4
전북	(17)	5.7
전남	(14)	4.7
경남	(9)	3.0
제주	(10)	3.4

※ 전체 기초통계 분석 결과(빈도 및 교차표>는 별책부록 2 참조

라. 조사과정상 문제점

- 2014년 표본조사의 경우 5,500만원 예산에 표본조사였던 반면, 2015년 조사의 경우 6,000만원 예산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동시 진행.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딪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의 초과사용으로 인한 예산부족.
- 일반 조사원 조사의 한계극복 및 예산절감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중간관리자 위촉 역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음. 향후 조사원 조사와 중간관리자 위촉의 병행이 필요.
- 기타 구체적인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의 양상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일맥상통함.

마. 건의사항

-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대표적인 목록인 ‘한국민간단체총람’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단체 목록’이 전수·표본조사를 통해 부실함이 드러났음.
- 응답률 저조가 단체들의 조사저항 탓도 있지만, 폐쇄, 활동중단, 타지역 이전 단체들에 관

한 현황관리가 되지 않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단체들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주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조사가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매우 상이한 현황과 역동성을 보이는 각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있어서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주도성과 자원을 할애하는 대책이 요구됨.

3-2. 지원·서비스 전략 컨설팅

가.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앞의 <그림 1>이 제시하듯이 한국민간단체의 Data 구성은 [한국민간단체총람] 및 [행자부등록 비영리민간체] 분리되어 진행되었고 일부 자료는 중첩되어 있음
- 최근에는 그 중첩도가 증가하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단체총람] 제작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새롭게 형성된 풀뿌리 단체가 포함되기 보다는 대신에 행자부 신규 등록단체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임

- [비영리민간단체목록] 통계구축의 한계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근거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함
  - ✓ 이 법은 등록에 관한 내용만 다루며, 단체 활동 정보(변경/정지/소멸)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 등록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6월30일 현재 12,630개 등록되어 있으나 이 단체 중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음
  - ✓ 현재 등록단체의 50% 이상의 정보가 오류로 들어남 ※ 실제 전수(12,360개 중)에 대한 전화확인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단체는 6,000개에 불과함

- [한국민간단체총람] 통계구축 사업의 한계
  - ✓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보다 단순 총람제작에 목적을 두었음
  - ✓ 체계적 조사방법이 부재함
    - 홈페이지, 이메일/전화/팩스 조사로 단체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그침
    - 2011년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기존정보(2009년)를 그대로 활용함 ※ 33% 단체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함

나. 비영리민간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 두 축으로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 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이 자료를 기초로한 전수 및 표본조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업데이트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 행자부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를 포함하는 민간단체총람 작업도 2011년 조사

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사회적경제,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 지원, 국제협력 등-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단체에 대한 자료 축적 및 업데이트가 절실히 필요함

다. 법 개정 개선방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혹은 시행령 추가
  - ✓ 현행법은 민간단체지원을 위해 등록만을 관리하게 되어있지 정보관리 업무(단체정보 업데이트; 기초통계 구축사업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단방향적인 관리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음
  - ✓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 등록에 관한 시행령을 추가하여 초기 등록단체의 기초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 현재 지자체별로 등록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등록시 최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등록신청양식 개정이 필요함 (예) 단체고유번호, 활동목적, 주요활동 영역, 주소, 단체 홈페이지,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등록단체 업데이트 임무를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단체가 정기적인(최소 2년마다) 업데이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공모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함

라. 정책제언

- **NGO Database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향후 최대 정책 과제임**

✓ 중앙정부는 기초통계 시스템(기술적 부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지역 조사에 지원하는데 협력하며 더 나아가 기초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 및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가칭 '한국 NGO Database 전국네트워크'는 수평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쌍방향적 참여 및 협력관계로 운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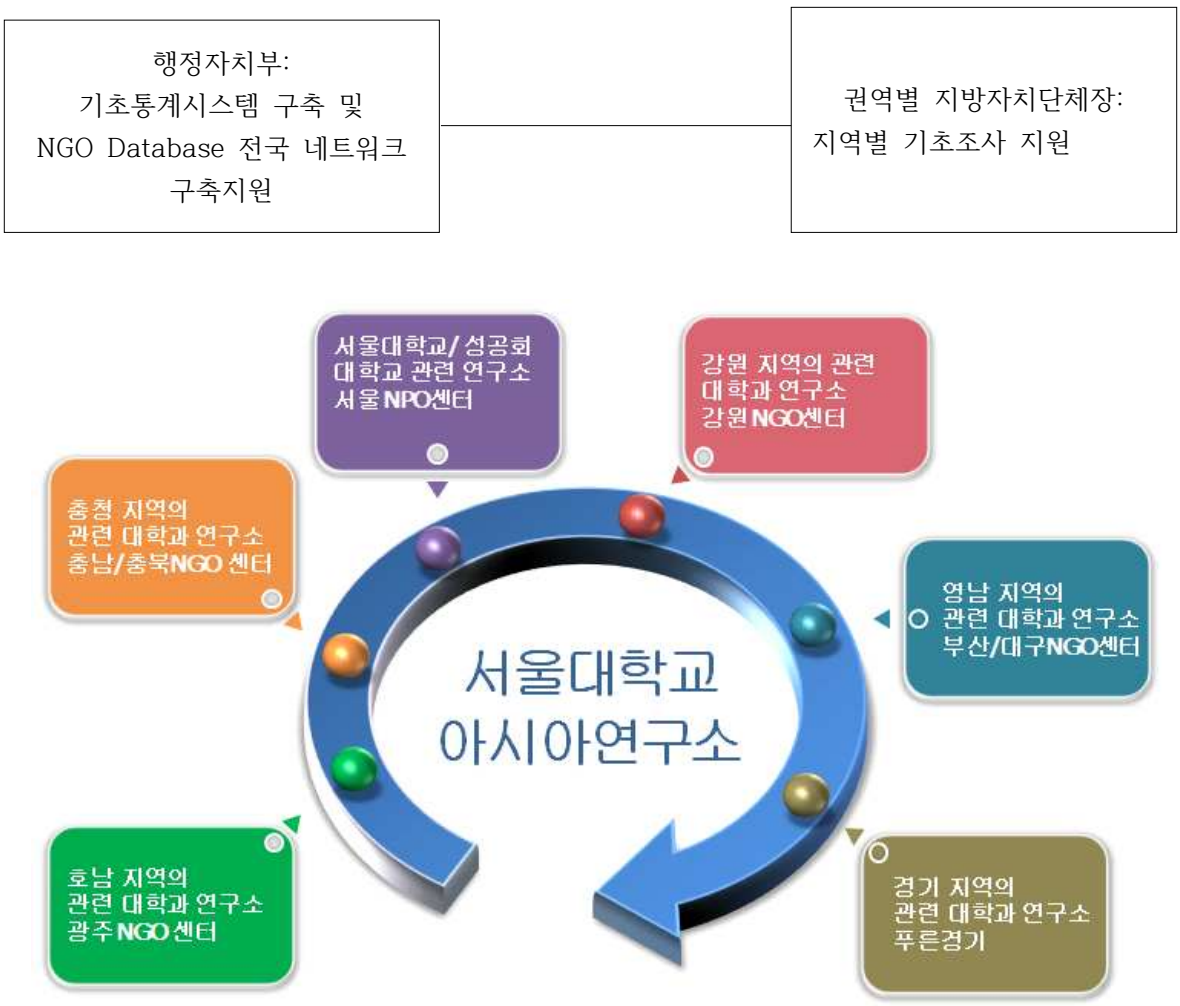
✓ 이 네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서비스 체계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한국 NGO Database 전국네트워크 구성 전략**
  - ✓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7개 권역별 중간허브센터 구축

✓ 쌍방향접근 전략 위에서 지역단위 자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기초통계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역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이어가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서비스를 위안 권역별 정부,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 간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 사무국은 지역 중간지원센터(NGO, NPO 센터 등)가 맡음

<그림 2> NGO Database 전국 네트워크 구축 모델(안)



• **전국 NGO Database 협력 네트워크 운영 원칙**

✓ 구성

- 권역별 연구기관, 지자체 및 중간지원단체 컨소시엄
- 10인 이하 위원회 구성
- 초기 3년 동안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및 기초시스템 구축 지원
- 공통조사항목 모듈 지정 단, 지자체별 별도 항목 추가 가능

✓ 운영

- 중앙등록단체와 지역등록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업무는 권역별 허브에서 관리함
- 중앙(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은 공통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시스템을 권역별 지역이 활용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1년 단위로 권역별 단체정보 업데이트 (중간지원단체 사무국), 회원제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무화함 ※회원혜택 유인기제 발굴: 사업정보 공유; 신청 자격 부여
- 지역조사는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함
- 연계자료: 국민운동단체, 사회복지단체, 국제협력단체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사업에 대한 단체간 협력 제고를 유도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략

- 정부차원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등록단체들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유인하고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전국 NGO 데이터베이스 협력 네트워크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지형도를 다양한 각도(영역, 목표, 활동유형, 연대활동, 거버넌스, 온라인활동, 국제협력 등)로 제공함